

● 제29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7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3. 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이상훈 의원 외 19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1. 02. 05
- 다. 회부일 : 2021. 02. 09
- 라. 의안번호 : 215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다양한 실천과 선언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음. 하지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정책만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도시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작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n Deal)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실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제시하며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가입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의 연계, 고탄소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의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는 중국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바야흐로 세계는 탄소 중립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상황임.
- 이러한 전세계적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작년 7월,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중앙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특히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탈탄소 도시로의 이행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모든 삶의 구조를 생태문명 중심의 녹색사회로 대전환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탈탄소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전략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임
-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함.
- 서울시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추진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하기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견인해야 함.

-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기후예산 제 도입, 총괄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포함한 시정 주요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의회차원의 관련 입법과 기후예산제 도입 등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파리기후변화협약(‘16년 발효)과 UN 기후정상회의(‘19. 9)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¹⁾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²⁾은 글로벌 의제가 됐으며, 코로나-19 발생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가속화되고 있음.
- ‘19년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³⁾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현재 전세계 경제규모의 3분의 2 이상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임.⁴⁾
- 이에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 규제와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新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⁵⁾

1)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 설립),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2) 인위적으로 배출한 탄소와 흡수한 탄소의 합이 영(zero)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탄소중립 사회란 탄소중립 상태를 달성한 사회,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20. 11.

3) 2019년 12월 출범한 새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고 EU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회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EU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을 발표함.

4) 글로벌경제, 이제 탄소에 울고 웃는다, 이코노믹리뷰, 2020.12. 7.

5)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 EU와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에 경제적 페널티를 주는 ‘탄소 국경세’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동차 배출규제의 상향, 플라스틱세를 신설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IMF·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음.
- 또한 구글·스타벅스·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의 RE100⁶⁾ 참여 및 ESG(환경·사회·기업구조) 투자 확대⁷⁾, 환경 비친화적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⁸⁾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됨.
- 우리정부도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시대를 맞아 지난 12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함(붙임. 1).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제시함(붙임. 2).
-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⁹⁾)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¹⁰⁾ 정부안¹¹⁾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지난 12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¹²⁾함.

6)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現 260여개)

7) 전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규모(달러, GSIA): (14년)18조→(16년)23조→(18년)30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8)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9)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1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11)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 환경부, 2020. 12. 15.

12)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은 각국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갱신) 및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2020년) 제출을 요청함, 환경부 장관 브리핑, 2020. 12. 7.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라는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붙임. 3)을 제시하고 있음.¹³⁾

<표-1>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주요내용

<p>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p> <p>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p> <p>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p> <p>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p> <p>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희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p>
--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주요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17년 배출량(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하고, 2025년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을 명시 하였음.¹⁴⁾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환경부, 2020.12.15.

14)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환경부장관 브리핑, 2020.12.15.

<표-2> 감축목표 설정방식 비교¹⁵⁾

	절대량 방식	배출전망치(BAU) 방식
2030 목표	•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채택 국가	•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	• 멕시코, 터키, 에디오피아 등 80여 개국
특징	•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공개 • 국제사회 높은 신뢰	•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 국제사회 낮은 신뢰

-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발굴 및 배출권거래제도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환경부-산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¹⁶⁾
- 서울수도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 하기 위해 2022년까지 2조 6,000억을 투입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붙임. 4)을 발표함.
 - '서울관 그린뉴딜'의 전략¹⁷⁾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68.2%), 수송(19.4%), 폐기물(6%) 분야의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도시 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동시 다발적으로 병행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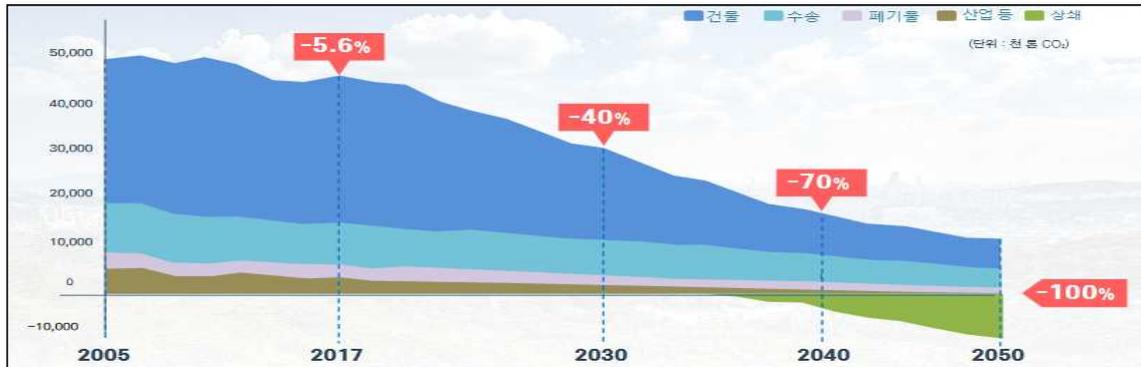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환경부, 2020.12.15.

16) 2050 탄소중립 논의 본격 개시, 환경부, 2021. 1. 29.

17)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7.

-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창출(’22년까지 총 2만 6천개)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1> 서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¹⁸⁾



-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 되는 가운데¹⁹⁾,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구체화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붙임. 5)을 발표하고, 국내 도시 중 최초로 탄소중립 계획을 담은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2050 Seoul Climate Action Plan)’을 지난 12월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C40 Cities-Climate Leadership Group)에 제출²⁰⁾하였음.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① 그린 빌딩 ② 그린 모빌리티 ③ 그린 숲 ④ 그린 에너지 ⑤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 전략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점검할 계획임.

18) 「서울시, 국내 처음으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C40 제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12. 29

19) 탄소중립사회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부총리브리핑, 2020. 12

20) 2005년에 설립된 기후변화대응을 약속한 대도시들의 모임으로 서울, 뉴욕, 런던 등 97개 회원도시로 구성된 C40은 파리협정을 계기로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원인인 에너지 사용이 도시에서 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회원도시들이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뉴욕, LA, 런던, 파리 등 미국과 유럽의 22개 도시가 이미 제출을 완료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이 처음으로 제출함,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12. 30

- 그간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을 살펴보면,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²¹⁾를 시작으로 ‘서울의 약속’²²⁾, ‘태양의 도시, 서울’²³⁾등을 추진해(붙임. 6) 왔으나, 각종 사회·경제적 여건 요인들이 감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임.²⁴⁾
 -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 추세이며, '18년에는 2005년 대비 4.8%²⁵⁾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그쳐 당초 목표로 삼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도 어려운 상황임.
- 또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공 의료,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이 중요한 시점임.²⁶⁾

<표-3>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천톤CO2eq)

구 분	200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49,445	46,817	45,673	45,646	46,986	46,685	47,073

-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서로 존중되는 세상 구현을 위해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공동선언(붙임. 7)한 바 있음.
 - 지난 11월에는 전환도시를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 및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4대 목표 10대 핵심전략과제를 발표²⁷⁾하고, 향후 서울시 전체 부서가 전환도시 핵심전략 과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전환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임(붙임. 8).

21) 1·2단계 합산 추진 성과 652만T0E(2012 ~ 2020)
 22)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23)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291MW로 목표(584MW)대비 50% 달성(2017~2022)
 24)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1. 1.
 25) 2005년 49,445천톤CO2eq 대비 2,372천톤CO2eq 감소(△4.8%),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21.1
 26)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20. 11.
 27) 「전환도시 서울을 만드는 실천전략(안)」 발표, 서울혁신기획관, 2020.11.26.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천만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추진전략²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²⁹⁾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이 단순한 기후 문제만을 위한 해법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전략³⁰⁾인 점,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의 핵심요소가 탄소 중립,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 지역순환경제인점 등을 고려했을 때,
- 전략 추진을 위한 사업부서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혁신기획관, 주택 건축본부, 도시계획국,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등 여러 상임위의 소관 부서로 분산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³¹⁾
- 다만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추진전략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³²⁾를 통해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미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와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과 혼란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효 중인 사정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8)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공동선언함. 2019. 9. 26.

29) 현재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도입,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화, 신축건물ZEB 의무화,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태양광보급 확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 등 관계부처에 건의안을 제출함.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7.

30) 그린뉴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의 극복 대안, 홍종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재정정보원, 2020

3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2)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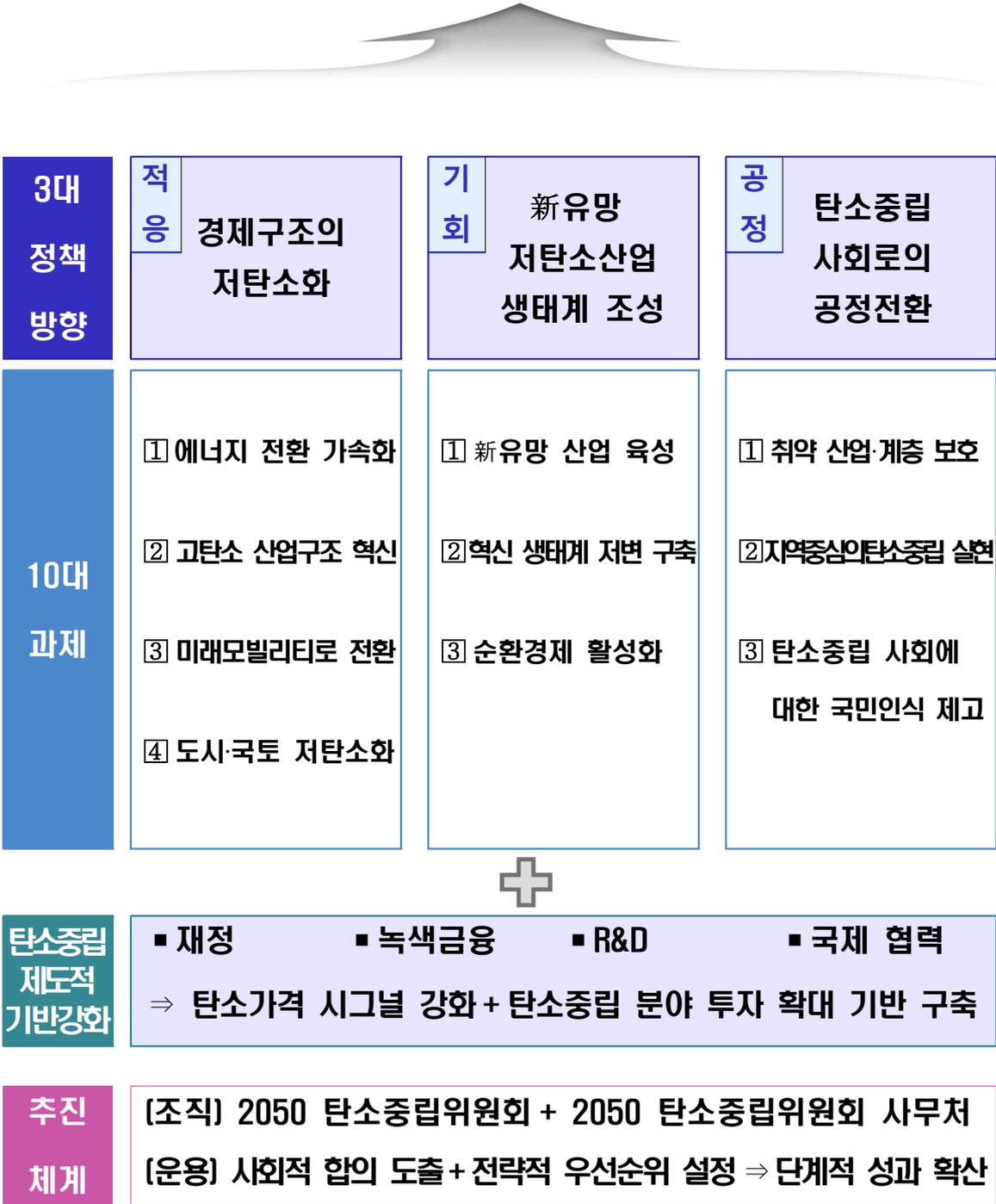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³³⁾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결과,
 -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그린뉴딜(탄소중립)과 관련해 소위원회가 활동 중으로, 현 상황에서 유사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소관부서에 업무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정책변화에 수반되는 일자리·고용복지·개발사업 계획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후환경분부를 포함한 서울시 산하 여러 관련부서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특위구성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임.
 - 기획경제위원회는 주된 이행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등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33)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1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비전 및 방향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붙임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 추진일정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21.3분기 '21.2분기	환경부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 「CCU 로드맵」 수립	'21.1분기 '21.2분기	과기부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 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① (전력·열 공급) 화석연료 중심 → 재생에너지 + 그린수소 + CCUS

- **(석탄·LNG 발전)** 기존 석탄발전소 감축 정책(수명 30년)을 더욱 강화하여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CCUS***와 연계·활용
 - *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의 활용(안정적 전력공급)은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적극 활용
- **(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수소활용)** 전력생산(연료전지), 운송(수소차), 산업(철강·석유화학)의 핵심인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린수소*** 공급체계 구축 필요
 - * 수소의 생산·운송·저장 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재생에너지→물 전기분해, 수입 등)
- **(망연계)** 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슈퍼그리드 등 보완 필요

② (산업) 미래 신기술,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 **(미래기술)** 에너지다소비 업종(철강·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강 **코크스(→수소환원제철*)** 및 석유화학 **납사(→혁신원료**)** 대체 기술 필요
 - * 철광석을 코크스 대신 수소로 환원 / ** 탄소수소의 화학적 반응 및 생물기반 원료로 납사 대체
- **(녹색전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공정 녹색화** 추진
-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제품생산 및 **자원순환 제고**로 원료사용 최소화*
 - * 철강(→철 스크랩), 석유화학(→폐플라스틱), 시멘트(→페콘크리트, 석탄재), 전자기기(→제품설계 표준화, 배터리 재활용), 식품 및 포장(→일회용 ↓, 포장재 ↓)
- **(불소계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물질로 대체를 촉진하고, 냉매의 재활용 및 전자공정의 플라즈마 기술 등 감축 수단 강화
- **(전환지원)** 저탄소·친환경 제품 등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 및 **좌초자산(화석연료 기반) 교체 지원**

③ (수송) 내연기관 중심 → 친환경 교통수단 + 지능화 + 녹색물류

- **(친환경차)** 친환경차 확대는 수송부문 탈탄소 목표의 핵심전략,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가 필요하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 *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교통수단(항공·해운)은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필요
- **(연료전환)**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 **(지능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지능형 교통시스템(교통수요↓) 최적화 및 자율주행차(교통사고↓, 에너지 효율↑) 대중화 가속화
- **(녹색물류)**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해운으로 전환

④ (건물) 에너지절감(녹색건축) + 에너지생산(태양광·지열)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 **(녹색건축)**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전환 가속화 및 신규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물 시스템 전면 적용으로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극대화
 - * 에너지 자가생산(→태양광 패널, 지열수열), 에너지 소비 최소화(단열·기밀성능 강화)
- **(효율개선)**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LED 조명 전면 보급 및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
- **(생활에너지)**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화로(가스렌지 대체) 및 전기·수소히터(가스히터 대체) 확산 필요

⑤ (농축수산) 친환경 농수산업 경영 및 저탄소 유통 추진

- **(스마트농업)**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스마트축사 확대
- **(저탄소농업기술)** 간단관개*, 논물 얇게 대기, 저메탄 사료 보급 등
 - * 물을 항상 담수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물을 주기적으로 관개하는 일(온실가스↓)
- **(친환경에너지)** 가축분뇨 에너지화, 태양광 보급, 지열 히트펌프 등

⑥ (탄소흡수원)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능력 제고

- **(조림)** 유희토지 등 신규조림 확대 및 식생복구 등 재조림 강화
- **(산림경영)** 숲 가꾸기, 수종갱신 등을 통한 영급구조(산림연령↓) 개선
- **(목재공급)** 목재제품 활용으로 탄소저장 확대 및 지속적인 갱신수요 확보

이행기반 혁신

① (정책혁신)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주류화 실현**

- **(이행평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및 파리협정에 따른 BTR*과 연계 강화
* 격년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국가별 NDC 이행 경과 보고
- **(제도기반)** 기후변화 대응이 정부 정책의 주류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기반 및 정책 간 연계(기후변화↔에너지) 강화
- **(탄소가격)**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시그널을 반영한 정책 설계,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와 보조금에 대한 개선 추진
- **(공공주도)**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2050년 이전 탄소중립 실현

② (사회혁신)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 및 참여 확대**

- **(인식제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 나아가 국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방위적 홍보 추진 및 환경교육 개선
- **(거버넌스)**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에게 **정당한 의사결정권** 및 참여 기회 보장, 경제·사회 전환에 따른 **갈등관리 메커니즘** 강화
- **(지역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성격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책임·권한 확대 및 지자체 적극적인 비전 수립 지원*
* 서울시 충청남도를 포함 전체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2020.6.5)
- **(녹색금융)** 민간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 유도 및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③ (기술혁신) **탄소중립 핵심 기술 집중 지원**

- **(융합·통합)** Power to Gas(P2G) 등 재생에너지와 화학전환 기술 융합, LNG-CCS 연계한 블루수소 등 부문간 통합적 기술정책 수립
- **(기술평가)** 기술 개발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체계적 평가 및 기술 전주기 환경성을 고려한 평가 플랫폼 구축
- **(투자강화)** 상용화와 보급 중심의 R&D에서 미래에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혁신적인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붙임 4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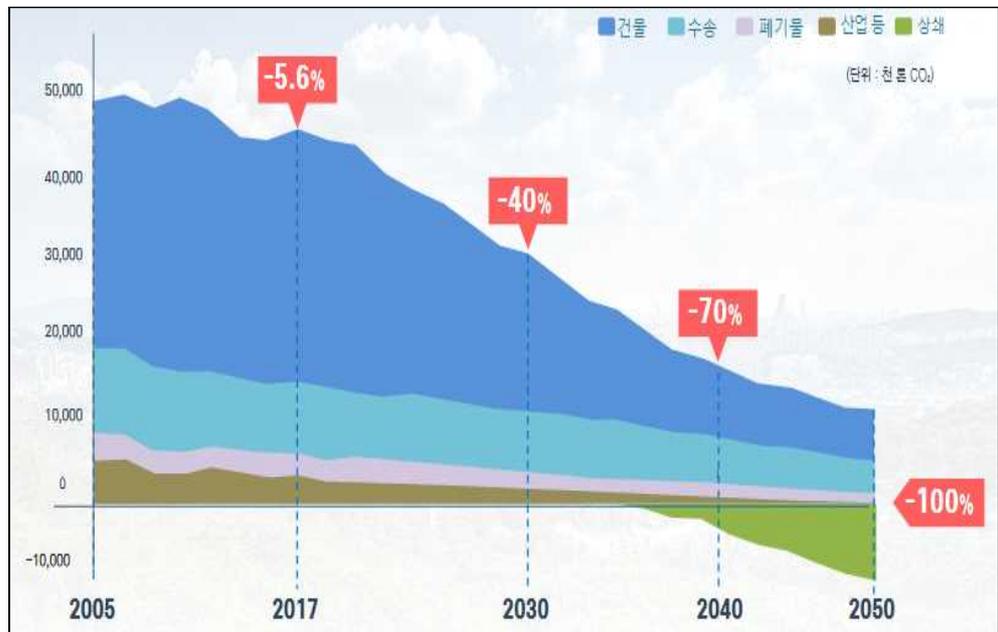
비전



목표



**연도별
감축
시나리오**



**추진
전략**

- | | |
|-----------|------------------------|
| ① 그린 빌딩 |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추진 |
| ② 그린 모빌리티 | 보행 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선도 |
| ③ 그린 숲 | 녹지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상쇄 |
| ④ 그린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
| ⑤ 그린 사이클 |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

붙임 5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부문별 주요 지표

재정투자('20~'25년)

구 분	계	그린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재정투자(억원)	48,058	8,757	32,072	786	1,369	5,074

부문별 주요지표

부 문	지 표	달성 목표
그린 빌딩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2050년까지 총1,532개소 (전체 공공건물의 30%) * ('20.)20 → ('21.~'22.)333 → ('23.~)1,179
	신축건물 ZEB 의무화	2030년까지 500㎡ 이상 모든 건물 ZEB 의무화 * 공공건물 : ('20.) 1천㎡ → ('21.) 5백㎡ * 민간건물 : ('23.) 10만㎡ → ('24.) 1만㎡ → ('25.) 1천㎡ → ('30.) 5백㎡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2022년부터 민간 건물로 확대 * 공공건물 : ('21.) 사소유 1천㎡ 이상 사업 → ('22.) 사소유 1천㎡ 이상 * 민간건물 : ('22.) 에너지소비건물(324개) → ('23.) 연면적 1만㎡ 이상
그린 모빌리티	내연기관차량 등록금지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차량 등록금지 * ('21.) 시내버스 → ('30.) 택시 → ('35.) 모든 내연기관차량
	전기차 공용충전기 보급확대	2022년까지 충전기 2,000기 구축 * 급속 : ('22.) 1천기 → ('25.) 1.5천기 → ('35.) 2.5천기 → ('50.) 3천기 * 완속 : ('22.) 1천기 → ('25.) 1.5천기 → ('35.) 1.5천기 → ('50.) 1천기
	도심 도로공간 재편	2025년까지 녹색교통지역 22개 간선도로 재편 * ('19.~'21.) 3개 4km → ('22.~'23.) 10개 11km → ('23.~'25.) 6개 9km
그린 숲	도시숲 확대를 통한 공원도시 서울 추진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완료 * (~'22.) 도시숲 조성 (~'30.) 도심 생활권 공원 확충
그린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설치	2050년까지 태양광 5GW 설치 * ('22.) 0.5GW → ('30.) 1.5GW → ('40.) 3.5GW
	연료전지 보급확산	2050년까지 연료전지 1GW 설치 * ('22.) 315MW → ('30.) 540MW → ('50.) 1,000MW
그린 사이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2026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 (~'21.)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 (~'24.) 선별부대설비 설치
	재활용·새활용문화 확산	2030년까지 1자치구 1리엔업사이클 플라자 조성 * (~'22.) 5개소 → (~'30.) 25개소

붙임 6 서울시 기존 에너지 정책 추진 경과 및 성과

〈서울시 온실가스 정책 추진 경과〉

- ◇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 회의 개최(2009. 5)
 - 72개 도시 및 4개 국제기구 참가, Low-carbon city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선언 발표
- ◇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발표(2012. 4, 원전1단계)
 - 2014년까지 원전 1기 생산량(200만 TOE) 상당의 에너지 절약 및 생산 목표
-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발표(2014. 8, 원전2단계)
 - 2020년까지 원전 2기 생산량(400만 TOE) 상당의 에너지 절감 및 생산 목표
- ◇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2015. 4) 및 서울의 약속 선포
 - 91개국 316개 도시 참여, ‘서울의 약속’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실행력 확보
 - ※ 서울의 약속 목표 : '05년 대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 수립(2015.11)
 -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해 5대 분야 16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행동계획
-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발표(2017.11.)
 - '22년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로 확대
-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7~'21) 수립(2017.11.)
 - 완화부문(온실가스 감축) 59개 과제, 적응부문(건강분야 등) 69개 과제
- ◆ **세계적 환경도시로 이미지 제고와 국제사회 평가**
 - UN 공공행정상 등 총 7차례 국제상 수상 등 우수사례로 국내외 전파

UN 공공행정상 (시민참여추진)	기후변화대응 행동리더 도시상	기후변화대응 행동우수 도시상	도시기후 리더십 어워드	글로벌 최우수 환경도시상	블루 스카이스	블룸버그 어워드
						

1 원전하나줄이기('12년 발표)

□ **목 표** : 1단계 및 2단계 사업을 통해 총 에너지 생산·절감 650만TOE(3.25기분), 전력자립률 20% 달성('12년~'20년)

□ **성 과**

- '19년까지 총 에너지 생산·절감량은 598만TOE를 달성 중이며, '20년까지 당초 목표 달성 예상
 - 태양광 설치, BRP 및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 총 487만명 참여(~'19년)
 - 시민대토론회 통해 정책논의, 에너지정책위원회 등 운영하여 정책자문
- 전력자립률은 '19년 말 기준 5.7%('19년까지 목표 17%)
 - 태양광·연료전지 목표달성,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연중 가동하면 '20년 전력자립률 15.5% 예상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1·2단계 실적, 2019.12〉

구 분	총 에너지 생산·절감량	전력자립률
'19년 목 표	570만 TOE	17.0%
'19년 실 적	598만 TOE	5.7%
'19년 달성률	105%	△11.3%

- ▶ (생 산) 58만 TOE : 태양광 250.1MW, 연료전지 135.1MW 보급 등
- ▶ (효 율 화) 388만 TOE : 녹색건축 설계기준, BRP, 공공기관 LED 100% 보급 등
- ▶ (절 약) 152만 TOE : 에코마일리지 211.3만명 가입, 폐기물 재활용 증가 등

- **선도적 에너지사업 타 지자체 확산 및 정부 에너지 정책에 반영**
 - 서울형 FIT³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에너지 자립마을 등 사업 타 지자체 확산
 - '12년부터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반영

34) 서울형 FIT(Feed-in Tariff) : 소규모 발전시설 생산 발전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하여 태양광 보급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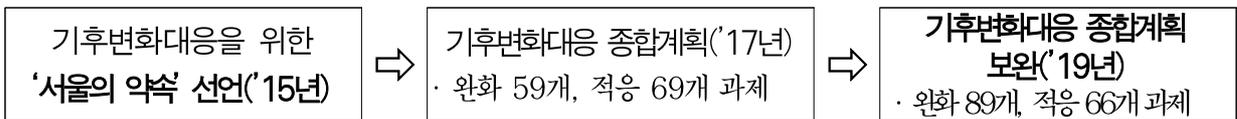
2 서울의 약속('15년 발표)

□ 목 표 : '05년 대비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05년(기준년도)	⇒	'20년(25% 감축)	⇒	'30년(40% 감축)
4,945만톤		3,710만톤		3,000만톤

□ 성 과 : ' 05년 대비 ' 19년 온실가스 202만톤 감소(추정치)

- 서울의 약속 실천계획을 반영한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17.11.)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보완 계획 수립(2019.3.)
 - 시민 옴부즈만 참여, 전 실·본부·국 총력 추진체계 구축 및 감축사업 추진
 - 완화부문(온실가스 감축) 89개 과제 추진



- '05년과 비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온실가스 발생은 감소하였음
 - * '05년 대비 '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국가 26% 증가, 서울시 5.6% 감소

3 태양의 도시, 서울('17년 발표)

□ 목 표 : '22년 태양광 보급 1GW,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미래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서 태양광 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17.11)
 - ※ 태양광 발전시설 1GW 보급 시 연간 온실가스 544천톤 감축 가능
 - * 연간 1,168GWh³⁵⁾ 생산, 온실가스 감축 계수 0.466톤CO₂/MWh
- 사업구성 :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
 - * ① 태양광 100만 가구 ② 공공건물 부지 보급 ③ 시민참여 확대 ④ 랜드마크 조성, ⑤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⑥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⑦ 태양광 산업육성

35) 연간 1,168GWh 생산으로 약 31만 가구(전력소비량 309kWh/월·가구) 전력 공급 가능

□ 성 과

-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250.1MW로 목표(357.1MW) 대비 70% 달성

보급용량(MW)	계	공 공	학교	민 간			
				소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누계('03~'19)	250.1	66.4	31.6	152.1	33.2	40.6	78.3

-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84천 가구로 '19년 목표(284천가구) 대비 100% 달성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발표 이후, '18~'19년 2년간 99.5MW(매년 약 50MW)를 보급(※ '03년~'19년 누적 물량 250.1MW의 1/3에 해당)

우리는 기후비상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2019년 들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이 앞장서 기후위기 또는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백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각 나라가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는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소집했고 전세계 7,000개가 넘는 고등교육기관들이 기후비상사태 선포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지구사회 곳곳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지식인·연구자 664명의 선언이 있었고 서울에서 대규모 기후위기비상행동(Global Climate Strike)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멸종위기종 청소년들의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상황과 산업시대 종언의 징후들은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되고 나라 안팎의 선언과 행동들은 이제 인류사회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하여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서로 존중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선언합니다.

1.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에 집중한다.
2. 서울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서울시민을 지키고, 현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도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한다.

3.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제로에너지 학교를 만들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도록 생태전환 교육기반을 강화한다.
4. 서울시는 시 산하 모든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생태문명전환 교육을 기본과정에 반영한다.
5.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마련과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시간을 적극 확보한다.
6.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돕기 위하여 기후활동 지원 예산 마련을 위해 적극 힘쓴다.
7. 서울시교육청은 균형 잡힌 영양 보장과 채식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는 학교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급식의 시대가 열리도록 노력한다.
8. 서울시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지역경제의 강화와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을 선언하고 지역 내 지역 간 경제의 순환성과 자족성 강화를 지원한다.
9.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문명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2019. 9. 26.

서울특별시
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 희 연

붙임 8 「전환도시 서울」 4대 목표 10대 핵심전략과제

핵심전략과제 도출 : 4대 목표 10대 핵심전략과제

목표 1. 전환도시 지역기반 구축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SOC 확충
2. 지역기반과 지역특성에 대한 기초조사·연구 지원

목표 2. 전환주체 형성과 연계

1. 지역 내 다양한 전환주체 연계
2. 생활권 기반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전환주체 형성
3. 소상공인 등 민간 경제부문을 전환주체로 형성

목표 3. 지역순환경제 조성

1.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할 전환경제공동체 단계적 조성
2.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3. 도시-농촌, 소비자-생산자의 순환구조 확립

목표 4. 전환도시 역량 강화

1. 학교 및 평생 교육에서의 전환교육을 통해 전환도시의 저변 확대
2. 관련 조례, 지표, 기준 등을 전환도시에 맞춰 개선안 마련